민관합동위, 베를린 등 6일간 독일 방문 마치고 귀국

"세종시 해법, 자족기능 강화가 관건"

행정기관 빠져나간 자리에 대기업·UN기구 등 유치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 7명이 6일간 유사한 행정기관 분산이 이뤄진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민간위원들은 정부가 내달 11일 세종시 수정 대안을 발표하기 앞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독일은 통일 후 연방 정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베를린-본 법안'을 제정, 16개 부처 중 10개는 베를린에, 6개는 본에 두고 각각에 제2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베를린을 찾은 민관합동위는 행정기관의 분산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통독 후 베를린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페터 쥘 전(前) 베를린시 도시계획부 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부처 분산으로 매년 최대 5천만유로(약 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본에 소재한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2등급 부처'라는 자조도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민관합동위는 22일 본으로 이동해 행정기관이 베를린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대기업, 유엔기구 등이 유치되고 IT(정보기술) 산업이 들어선 발전상을 확인했다. 본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에게 하나의 모델 역할을 한 셈이다.

다만 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통해 이곳 6개부처의 베를린 이전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베를린-본 법안'을 개정하거나 행정기관 이전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정서를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위는 23일 과학도시 다름슈타트를 방문해 입자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된 독일 중이온연구소(GSI)를 둘러봤다. 중이온가속기는 정부가 세종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이다.

독일 방문을 마친 한 민간위원은 "행정기관이 빠진 자리에 다른 기관이 유치돼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본의 사례를 보면 긴 안목에서 행정기관은 (세종시에) 안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 등이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다음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방독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세종시 대안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내 첫 62피트급 스틸요트 건조

목포 소재 푸른중공업

전남지역 한 선박기업이 자체 기술로 장기 요트 항해가 가능한 62피트급 중형 스틸 강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했다.

특히 이번에 건조된 요트는 전남도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조선 기능인력양성 사업 일환으로 우수 인력 초빙·기술지도를 통한 국산화 기술 성과물이어서 전남도의 해양레저선박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목포 삼학도 마리나에서 목포지역 중소형 선박기업인 푸른중공업 김봉철 대표이사와 정병재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홍종희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용 62피트 급 스틸 강선요트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식을 가진 스틸 강선요트는 50t 규모로 최대마력 235마력, 승선 인원 20명인 중형 요트로, 해양 스포츠 레저활동뿐만 아니라 대양에서 장기 항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공항 면세점 내일부터 재개장

전남개발공사 직영키로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철수로 휴점 상태인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이 새롭게 재개장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무안국제공항내 면세점을 새롭게 단장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9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로 현재 휴점 상태가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을 직영키로 했다.

면세점은 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 인접한 공간에 110.76㎡규모로 마련됐으며, 세련된 실내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에서는 주류, 담배, 화장품 등의 품목과 함께 전남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전남알리기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아테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2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자피온 회의장 앞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다. 아테네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다양한 축제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강운태 "광주시장 경선 예비선거제 도입했으면"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24일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뜻과 기대를 확인한 이상 임시국회가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에서 경선방법 등을 잘 정할 것으로 보며, 어떤 방법도 개의치 않는다"면서 "다만 경선투표 참가를 희망하는 당원이나 시민은 누구든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예비선거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경선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면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초가 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광주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다"며 "경선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선문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지하철 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선문 의원이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07년 1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역사 1구간 청소·방역사업 입찰에서 위·변조된 실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섭 "재해예방사업 20억 확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4일 "광산구 관내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13억원) 및 농업재해예방 사업(7억원)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운남동과 삼도동 칠성지역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임곡·본량·동곡동 등 광산구 농촌지역 일원의 농업재해 예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반복적인 재해로 큰 불편을 겪어오던 지역은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농업재해 예방사업의 경우 최근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심화 및 강우량 감소 등에 의한 한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타협 막힌 정국 뚫어야"

○…민주당 김영진(사진) 의원 등 기독교를 믿는 여야 의원들은 24일 여야 지도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성순 이윤석 조배숙 의원, 한나라당 황우여 남경필 원희룡 이군현 이경재 의원 등 35명의 기독 의원들은 이날 성탄절 맞아 작성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치권이 4대강 격돌과 세종시 기싸움으로 날을 새우는 동안 서민과 농어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의회 추경안 처리 '법정다툼으로'

○…전남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24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3일 전남도 3차 추경안은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농민단체와 연대해 '결의처분 무효 확인소송'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현재 중앙당 법률팀에 이 문제가 올라가 있다"면서 "중앙당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늘 중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고송자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 민주주의 폭거이며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제4경마장' 담양 유치 무산

경북 영천시 확정

전남도가 담양군에 추진했던 한국마사회 제4경마장 유치가 무산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이날 과천·제주·부산에 이은 제4경마장 최종 입지 예정지를 경북 영천시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경마장 유치전에는 담양군을 비롯한 경북 영천·상주시, 인천 용유도, 전북 정읍·장수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들 지자체 중 부지 적합성, 입지여건, 사업추진의 효율성,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 등을 평가해 경북 영천시를 최종 입지 예정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연간 2천억 원의 지방세 수입과 1천~1천500명 가량의 신규 고용 창출,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1월30일 한국마사회에 유치 신청서를 낸 뒤 유치전에 뛰어들었었다.

전남도의회도 제245회 정례회에서 "신규 경마장을 지역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에 유치돼야한다고 마사회에 건의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경마장 유치에 지원사격을 했지만, 결국 유치에 실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